

環境保全과 山林經營

金 樟 洙 / 林政研究會 會長

지 구촌의 환경문제는 그 심각성이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공업시설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고, 이로 인한 직접 피해가 커다란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953년에 일본의 질소화학공업사에서 부산물인 폐철수은을 미나마따만으로 흐르는 강에 버리므로 부근어촌에서 기이한 질병이 퍼졌으며, 1952년 영국 런던의 살인안개사건과 1948년 미국의 도노라 안개사건은 기계문명에 의해 인류 스스로가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심각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자연의 정복을 인간의 고유가치로 여기고있는 집단과 사상을 스스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땅을 인간의 소유물로만 여기던 기독교 사상에 신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연을 정복한다는 기계론자들의 생각은 환경학자 생태학자들에 의해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카운트 부폰(Count Buffon)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최초의 서양 과학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정착생활의 모습과 비 거주지역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옛부터 거주한 지역은 산림, 호수, 늪지가 적은 반면, 황야의 관

목림이 많으며 산들은 험벗고 나무와 풀들이 공급하는 유기물이 부족하므로 토양은 비옥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폰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자연에서의 주된 변화, 즉 동물의 가축화와 식물의 작물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와같은 인간의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자연에 대한 정복이라는 개념은 무모하게도 우주전체에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생존을 돕고있던 모든 요소들, 맑은 공기, 울창한 숲, 깨끗한 물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한 질병의 증가, 쾌적한 환경의 파괴가 급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문명의 이기라고만 생각하였던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 스스로에 의해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연이 오염된 환경으로 변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조사하여 환경보전에 힘을 기우려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일부 자연보호학자, 임학자 그리고 환경학자와 생태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통일문제와 함께 근본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환경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자원조성이 추구되어야할 문제이며 특히, 산업화, 도시화로서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우리들의 생존을 위하여 울창한 숲을 만드는 것이 잘사는 길임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산림경영에서는 오늘날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사이에는 큰 차가 있음을 우리들은 명백히 인지하여야 한다.

국가적 정책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할 때에 조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은 강조하여도 끝이 없는 것이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조림은 묘목을 심어만 놓으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보다 좋은 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계속하여 육림과 관리가 필요하며 조림에 대한 경제성이 뒤따라야한다. 그동안 치산녹화사업으로 녹화는 되었으나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육림, 관리에도 노력을 집중할 때이다.

조림한후 30년이나 길러낸 나무를 벌채해 팔려고 하여도 벌채비도 나오지 않는다. 농촌의 노동임금의 상승, 외재의 도입으로 인한 내재의 가격차이, 농산촌의 과소인구 등은 현재의 조림, 육림사업을 크게 압박하고있다. 그러면 총산림 면적의 72%를 민간이 담당하여야할 사유림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것인가는 오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장차 임업에 부과된 큰 문제인 것이다.

당국에서 발표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방향을 보면 협동영림계획 작성으로 자율적으로 산림경영을 유도하며 조림, 육림등 협업체 공동작업으로 경비절감하고 임목벌채생산에 중간상인을 배제하여 수익을 증가하고 임산물을 공동생산 및 직접거래로 소득을 배로 늘리고 산림경영의 기술, 재정등 집중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89년부터 2000년까지 57협업체를 833으로 늘리고 내용적으로 임업진흥지역('90-

'94)에 500개, 기타 산림지역(95-2000) 333개를 만들고 산림면적은 각각 150만ha, 100만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造林된 총면적 670만ha에서 100만ha가 되는지 또는 150만ha가 되는지, 확실히 답변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의 조림실적이 100만ha로 완성되고 내용으로 경제수종을 적지에 심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시하고 있다.

여기에 임업지원금으로 정부출연금, 산림개발자금이 있는데 1974년부터의 실적을 보면 정부출연금의 79.2%가 조림, 육림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산림개발자금용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조림, 육림, 양묘사업의 경우에도 이들 기금용자에 의하여 실시된 사업량이 전체 사업량의 0.8-2%에 있으며 산림경영자로 보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20년 이하의 유령림이 많은 산림에서 간벌, 제벌등 육림작업을 하지못하면 산림으로서 울창한 산림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육림비에 대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올바른 山林을 조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경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간벌등을 하여 산림이 정상적인 생장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같은 임무를 달성하여야할 산림경영자들은, 외부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도전을 받아서 어려운 입장에 있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재정적 임업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한다.

산림경영을 하여 현재 목재자원조성을 이룬후 누구에게 혜택이 되돌아 오느냐? 산림경영자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화도 방지하고 산림해충도 구제하고, 산림을 미림으나 만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가 있

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산림경영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토지공개념에 따른 소유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에 밀려오고 있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등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은 농산촌사회의 개방화, 민주화, 가치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힘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의 주체가 지방사회집단체의 활동으로 활성화 되어야하고 또한 농산촌의 지역사회가 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상업문화에서 벗어나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농산촌문화가 발달 되어야한다. 지방화시대의 자율적인 자치행정이 가능하도록 농산촌행정제도가 개선 되어야한다. 이와같은 지방시대에 부합되는 행정계획을 거쳐서 시도군의 독자적인 정책이 있어야하며 또 커져가야 하겠다.

그러나 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에 대한 육성, 방재를 원활히 하기위하여서는 보조금행정, 중앙기관의 기술적지원, 기동성있는 장비배치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있다.

목재자원조성을 목적으로할 때에 정책수단의 축적은 소위 기업의 경영자원의 축적과 같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정책과 같은 급변하는 시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를 맞이하면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도시를 포함한 단체보다도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그동안 산림이 보전 육성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지만 임업투자에 대한 수익성의 보장과 산지의 종합적 체계적 이용, 개발에는 동한시하여 주변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다. 특히 산림을 많이 가질수록 빈곤상태를 탈

피하지 못하며 산림지역의 경제는 평지 산촌 호당 소득의 60~70%이며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은 산림경영 특히 산림부산물생산계획, 임도시설, 비임업분야개발, 휴양인구를 대상으로 휴양림시설등을 종합 개발하여 임업자원을 지역자원에 포함시켜서 산촌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산림을 환경보존과 넓은 뜻을 가진 산림경영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관할권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국립공원도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요시하고 있는 산림경영에 중점을 둘수있는 산화방지, 병충해구제, 산림경관보호, 동식물번식, 임목육성등을 포함한 관리능력을 가진 산림청산하에서 관리하면 자연파괴를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